

통하는 충남, '국비 13조 시대' 가시권

내년도 정부예산안 13조 2632억원 확보...올해 보다 9409억원 증액

충남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3조2632억원의 국비를 반영하며 '국비 13조원 시대'를 가시화했다. 첨단 디스플레이와 광역교통망, 역사문화, 방산 등 민선 9기 핵심사업이 정부안에 대거 포함됐다.

충남도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도내 주요 현안 사업비 13조2632억원이 반영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안 11조9297억원보다 1조3335억원(11.2%), 국회 최종 확정액 12조3223억원보다 9409억원(7.6%) 증가한 규모다.

도는 당초 13조5000억원을 목표로 정부예산 확보에 나섰으며, 부처안 13조1648억원에서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98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국립 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운영 14억6000만원,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93억원, 2029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신축·개보수 45억원,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41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의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은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 연구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충남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탬 전망이다. 극한환경 모빌리티 주행성능 평가 기반 구축 15억원과 중부권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건립 13억5000만원 등도 정부안에 이름을 올렸다.



계속사업에는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435억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545억9000만원, 장항선 복선전철 450억원,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 94억원, 하수도 보급률 향상 2047억원 등이 포함됐다.

평택·당진항 진입도로는 부처안 1억 원에서 435억원으로,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은 10억원에서 94억원으로 정부안 심의 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AI 특화 시범도시와 충남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신설,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권 국립 호국원 조성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정부안에 반영된 사업은 한 톨도 빠짐없이 지켜내고, 미반영 현안도 국회 증액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미디어 충청 주요 뉴스



01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에 67조 투자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에 총 67조원

▶02면



02 장기수 천안시장 '아침시장실' 가동

장기수 천안시장이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한다

▶04면



03 충남대·공주대 통합, '상생의 선택'인가 '흡수통합' 우려

충청권 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이 중대 기로에 섰다.

▶06면



04 140명 증원 행정혁신인가 몸집 불리기인가

천안시가 민선 9기 첫 행정조직 개편 공무원 정원 140명가량 늘리는 방안 논란

▶07면

제31회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 축제기간** 2026. 9. 4.(금) ~ 11. 8.(일)
- 장 소** 홍성군 서부면 남당항 일원
- 개막행사** 2026. 9. 4.(금) 16:00 ~ 18:00

• 축제 체험과 남당항 명소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에 67조 투자

OLED·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구축...충남도, 전력·용수·인력 지원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 아산을 중심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에 총 67조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충남도는 전력·용수·인력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대규모 투자가 실제 생산시설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충남도는 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충남 첨단산업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아산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기반시설 지원 등에 협력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첫 단계로 아산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내 9만9141㎡ 부지에 2028년 6월까지 신규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도와 아산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맡고 한전과 수자원공사는 대규모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과 용수 공급을 지원한다.

이번 투자는 지난 7월 정부와 충청권이 발표한 202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지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 투자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추가 투자와 집적을 유도해 산업 생태계 확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시군, 기업,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충남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있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 지정과 직통전화 운영,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통해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한다.

도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SK 등 충남에 계획된 후속 첨단산업 투자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수현 지사는 "67조 원 투자는 충남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전력·수력·인력 '3력 혁신'과 광속 행정으로 기업 투자가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신용한 충북지사, 고속도로 확장 서명운동 첫 참여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 촉구...10월까지 도민·기업체 참여 확산



△ 신용한 충북지사가 범도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을 촉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의 첫 주자로 나섰다. 충북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지역 기관·기업으로 참여를 확대해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신 지사는 2일 충북도청에서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 범도민 서명운동'에 1호로 참여하

고 릴레이 서명 챌린지를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시작된 서명운동은 앞으로 청주·증평·진천·음성 등 관련 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주요 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부·경부고속도로 확장은 충북도가 20년 가까이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네 차례 타당성 검토가 진행됐지만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KDI 타당성 조사와 정책적 타당성 평가가 사업 추진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서명운동을 이어간 뒤 결과를 취합해 기획예산처와 KDI에 전달할 계획이다. 도민과 지역 기업의 사업 추진 의지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정책적 타당성 평가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신 지사는 "20년간 네 차례 타당성 검토만 반복된 숙원사업"이라며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체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새롭동, 주민 불편 해소 방안 논의

체육시설·CCTV·청년자치회 등 지역 현안 점검

세종시 새롭동주민자치회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새롭동주민자치회는 지난 3일 손인수 세종시의회원과 주민자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과 주민 건의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체육부지의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비롯해 여성친화거리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자치회 설립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필요성과

주민 편의, 지역 여건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주민자치회는 마을플랫폼 '새롭동 닷컴' 등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접수된 주민 의견도 공유했다.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지역 의제로 구체화해 해결 방안을 찾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동욱 새롭동주민자치회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가 지역 발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시선으로 충청의 오늘을 전합니다.

미디어충청

주간신문 (매주 화요일 발행)

제480호 | 2026년 9월 8일 화요일 | 창간 2013년 7월 30일

발행인·편집인: 엔케이미디어(주) 나경화 | 등록번호: 충남 다 01330
등록일: 2013년 7월 30일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181
대표전화: 041-415-1567 | 팩스: 0303-3130-1567
e-mail: nkmedaicc@naver.com

대전시,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 현안 협력 강화

정부세종청사 공직자 130여 명과 네트워크 구축
국비·현안사업 공조 요청…민선 9기 5대 전략 공유



△ 허태정 대전시장이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초청 네트워킹데이에서 발언하고있다.

대전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대전 출신 공무원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대전시는 지난 2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대전 향우 공무원 130여 명을 초청해 ‘2026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초청 네트워킹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확정과 인빅터스 게임 유치, 중대범죄수사청 대전지방청 건립 확정, 알데오젠 투자 유치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민선 9기 시정의 밑그림도 설명했다. 시는 △과학기술 기반 경제도시 △혁신행정을 통한 안전도시 △청년과 시민을 위한 포용도시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도시 △공간 가치와 녹색성장을 결합한 균형도시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과 첨단 벤처기업 2000개 육성, 온통대전 2.0 운영, 청년주택 5000호 공급 등 주요 사업도 소개했다.

지역 현안과 국비 사업이 정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 허 시장은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지역의 노력뿐 아니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대전 출신 공직자들이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과의 교류를 정례화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부예산 확보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 “석탄화력 폐지지역 실질 지원 필요”

민주당 지도부에 하위법령 지원책 반영 요청
대체산업·국고보조 우대 등 별도 계정 건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진행 하고있다.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4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서해안 에너지 전환은 충남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석탄화력 폐지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언급하며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 온 지역인 만큼 전환 과정에서

도 국가가 지역과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특별법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법령에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체산업 명시와 발전소 폐지계획 수립 시 관할 지자체 사전 협의·공청회 의무화 등을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폐지지역 국고보조를 산정 시 ‘지방우대지수’ 가중 적용과 지역전환협의체 운영의 광역자치단체 조례 위임, 기후대응기금 내 폐지지역 지원 별도 계정 설치 등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충남이 에너지 전환의 부담만 떠안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홍성의료원, 망막 촬영으로 심혈관 위험 예측

9월부터 AI 검사 도입…채혈·방사선 노출 없이 1분 내 분석

충남 홍성의료원이 눈의 망막을 촬영한 영상으로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검사를 도입한다. 홍성의료원은 9월부터 종합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AI 심혈관 위험도 검사(DrNoon CVD)’를 선택 검사 항목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눈의 망막에 분포한 미세혈관을 촬영한 뒤 AI가 혈관의 형태와 변화 등을 분석해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망막은 인체의 미세혈관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부위 가운데 하나로, 관련 영상을 활용해 심혈관 건강 위험도를 분석한다.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채혈이나 방사선 촬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건강검진 과정에서 촬영한 안저 사진을 활용할 경우 약 1분 이내에 AI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사 과정에 대한 수검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검진 단계에서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추가로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원은 보고 있다. 해당 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선정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검사로 시행할 수 있다. 홍성의료원은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 선택항목으로 운영한다. 의료원은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거나 40대 이상 중년층, 심뇌혈관질환 가족력이 있는 수검자 등에게 심혈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보



△ AI 심혈관 위험도 검사하고있다.

조적인 검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AI 검사 결과는 심혈관질환을 확진하는 검사가 아니라 향후 질환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식인 만큼, 위험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 의료진 상담과 추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김건식

홍성의료원장은 “AI 기술을 건강검진에 접목해 질환을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 개인의 건강 위험을 보다 일찍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최신 의료기술과 AI를 활용해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삶이
지역의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도, 충청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충청의 오늘

장기수 천안시장 ‘아침시장실’ 가동

첫 회의서 학생·직장인 등 참여...우수 제안 시정 반영·최대 500만원 포상

장기수 천안시장이 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는 ‘아침시장실’ 운영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장 시장이 3일 시장실에서 학생과 사회 복지사, 직장인 등 각계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첫 ‘아침시장실’을 열고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아침시장실은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느낀 불편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하면 시장이 직접 듣고 시정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제안된 아이디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 행정적·재정적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우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사에서 발표되지 않은 제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는 별도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선정 결



△ 장기수 천안시장이 아침시장실을 진행하고 있다.

과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천안시는 오는 11월 6일까지 시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아침시장실 정책 제안을 접수한다. 시민 참여를 확대해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발굴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통

로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장기수 시장은 “시민의 생각에는 천안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결한다는 구상이다. 부여군은 이번 행사를 단순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과 공동브랜드를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도농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국회 직거래장터는 부여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는 자리”라며 “다양한 직거래와 홍보 활

동을 통해 굿뜨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앞으로 수도권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거래 행사를 확대하고 굿뜨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과 신규 판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군청 진입도로 13년만에 4차선 확장

예산축협~군청 구간 지장물 철거 착수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진행하고 있다.

예산군청 주요 진입도로인 예산읍 예산리 일원의 4차선 확장사업이 장기간의 지연 끝에 본격 추진된다.

예산군은 예산축협에서 군청사로 이어지는 예산리 8-15번지 일원의 지장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도로 확장공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 인수를 완료했다. 이어 석면 해체·제거와 건축물 철거, 부지 정비를 마치는 대로 도로 확장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은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군청을 오가는 차량이 집중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병목현상과 교통정체가 반복돼 왔다. 보

행자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군은 2013년부터 토지·건축물 소유자 측과 부지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인수를 마무리했다.

군은 철거와 부지 정비를 신속히 마친 뒤 도로공사를 연계 추진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차량 병목과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여 ‘굿뜨래’, 국회 직거래장터서 판로 확대

부여·공주·청양 농특산물 한자리에...수도권 소비자 공략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진행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이 국회에서 열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해 지역 공동브랜드 ‘굿뜨래’의 수도권 판로 확대에 나섰다. 부여군은 지난 2일 ‘2026년 국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굿뜨래 브랜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판매 활동을 벌였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

터는 부여·공주·청양 등 충남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직접 소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여군은 행사장에서 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굿뜨래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품질과 안전성 등을 홍보했다. 특히 유통 단계를 줄인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동시에 농가의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도권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굿뜨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구매로 연

삼성 113조 아산 투자...35년 산업 동맹 확장

온양 HBM 증설·탕정 디스플레이 2단지 재개...반도체·디스플레이 거점 강화



△ 삼성 이재용 회장, 박수현 충남지사, 오세현 아산시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삼성이 충남 아산에 113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아산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이어진 삼성과 아산의 산업적 결합이 첨단산업 투자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정부의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삼성은 지난 7월 충청권에 약 14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다. 이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67조원,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 46조원 등 113조원이 아산에 집중될 예정이다. 삼성과 아산의 인연은 35년 전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1990년 9월 온양사업장 건설에 착수해 1991년 11월 가동에 들어갔다. 초기에는 D램 등 반도체 조립과 검사를 담당했지만 이후 패키징 기술과 제

조 노하우를 축적하며 삼성 반도체 후공정의 주요 생산기지로 자리 잡았다. 온양사업장은 AI 반도체 시장 확대를 계기로 다시 변화를 맞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HBM 첨단패키징 생산시설을 증설한다. 새 공장에는 축구장 약 4개 규모인 3만 1000㎡의 클린룸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1일 착공했으며 2029년 5월 HBM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7월 22일 삼성전자 DS부문 TSP 총괄과 업무협약을 맺고 인허가 등 투자 과정에 필요한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 투자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삼성은 2003년 탕정면 일원에 TFT-LCD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을 구축했고, 이후 탕정 일대는 국내 대표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으로 성장했다. 지난 1일에

는 충남도와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67조원 규모의 첨단 전략산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핵심은 장기간 중단됐던 '아산 디스플레이시티2 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재개다. 디스플레이시티2는 2017년 공사에 들어갔지만 업황 둔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21년부터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사업이 본격화하면 기존 1·2캠퍼스와 연계한 생산·연구개발 거점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의 장기 투자는 아산의 산업구조도 바꿔놓았다. 대규모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와 인력이 유입되면서 생산과 연구개발, 물류를 연결하는 산업생태계가 형성됐다. 이번 투자 역시 기존 사업장과 협력기업, 산업 인프라가 이미 구축돼 있다는 점이 아산의 경쟁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과 지역사회의 관계도 30년 넘게 이어졌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농산물 직거래 등을 진행해왔고, 삼성디스플레이도 2013년 아산시와 '행복아산 업무협약'을 맺은 뒤 복지·교육 분야 사회공헌사업을 이어왔다. 아산시는 이번 투자를 지역 산업구조를 한 단계 끌어올릴 기회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양축으로 협력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삼성의 투자는 아산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라며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남당항서 '서해랑길 자전거 페스타'

19일 천수만 해안서 라이딩·BMX 공연...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따릉이 홍성 서해랑길 자전거 페스타가 진행될 도로와 홍성스타타워 모습

충남 홍성 남당항과 천수만 해안길이 자전거 축제장으로 변신한다. 홍성군은 오는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남당항 해양분수공원 일원에서 '2026 따릉이 홍성 서해랑길 자전거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군민과 자전거 동호인,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사는 서해랑길 63코스 남당항~궁리항 구간과 천수만 자전거 도로를 알리고 자전거를 활용

청양군, 내년 예산 앞두고 사업장 점검

주요 사업 8곳 확인...재정투자 우선순위 검토



△ 김홍열 청양군수가 현장에서 사업 설명을 청취했다.

청양군이 2027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주요 사업장을 찾아 추진 상황과 재정투자 찾아 추진 상황과 재정투자 필요성을 점검했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지난 1일 예산팀과 관련 부서장·팀장 등과 함께 관내 주요 사업장 8곳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 향후 추진 방향을 살폈다. 점검 대상에는 생활자원회수센터와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도립파크골프장 진입도로 개량공사, 비봉면 양사

리 리도 201호 개량공사 등이 포함됐다. 김 군수는 국·도비 확보 여부에 따른 군비 부담과 재원 확보 가능성을 따져 사업 우선순위와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군은 이번 점검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 재원 확보 가능성, 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쟁 위주의 자전거 대회에서 벗어나 가족 단위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딩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를 위한 자전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밸런스바이크 체험을 비롯해 6개 코스의 안전교육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유아나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트레일러 체험도 마련된다.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이색 경기도 열린다. 4명이 한 팀을 이뤄 4발 자전거로 경쟁하는 '4인 가족 자전거 빨리 달리기 대회'를 비롯해 어린이 장애물 자전거 대회와 자전거 제자리 오래 버티기 등이 진행된다. 천수만 해안 경관을 둘러보는 '도슨트 그룹 라이딩'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가이드와 함께 남당항 해양분수공원을 출발해 노을전망대와 노을어사리공원 등을 연결하는 약 3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BMX 자전거 퍼포먼스와 해

양 마술쇼가 각각 두 차례 열리고, 자전거 미니어처 키팅·자물쇠 만들기와 자전거 커스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방문객이 가져온 자전거를 대상으로 무료 점검·보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행사장 5개 스탬프 존을 돌아 인증을 완료하면 메달과 먹거리 등을 제공하는 '푸드트럭 스탬프 릴리'도 진행한다. 홍성군은 이번 행사를 남당항 해양분수공원과 스카이트라이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천수만 일대를 자전거 관광 코스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서해랑길 63코스의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은영 홍성군 체육관광과장은 "자전거를 매개로 가족과 관광객이 천수만의 풍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서해랑길 63코스가 전국 자전거 여행객이 찾는 해양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야외 해안에서 행사가 열리는 만큼 당일 바람과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대-공주대 통합, '상생의 선택'인가 '흡수통합' 우려인가

교명은 충남대·법적 주소는 대전...학과·정원·졸업장까지 곳곳 '불씨'
공주시의회 반대·구성원 반발 확산 글로컬대학 D등급까지 겹쳐...“통합 속도보다 내용·절차 검증 먼저”



충청권을 대표하는 두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와 국립공주대학교의 통합이 중대 기로에 섰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 속에서 대학 규모를 키우고 연구·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통합의 명분이지만, 정작 통합대학의 교명과 본부, 학과 개편, 학생 정원, 졸업장 등 대학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사안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예정된 구성원 찬반투표를 앞두고 양 대학 구성원은 물론 공주 지역 사회까지 반발하면서 논란은 대학 내부를 넘어 지역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

통합안 먼저 의결하고 설명회...‘절차적 정당성’ 논란

논란의 중심에는 통합 추진 절차가 있다. 양 대학 통합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통합신청서안을 심의·의결했다.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 법적 대표 주소는 대전으로 하고 대학본부는 대전과 공주 양쪽에 두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공주대 4개 직능단체 대표 4명과 충남대 소속 위원 3명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일부에서는 교명과 본부 등 대학 정체성을 좌우할 사안에 대한 사전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통합신청서 공개와 설명회가 신청서안 의결 이후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지난 3일 공주대에서 열린 설명회는 시민·동문 등의 거센 반발 속에 장시간 파행을 겪었다. 결국 쟁점은 ‘통합이 필요한가’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충분한 정

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가 설계됐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교명은 충남대, 법적 주소는 대전...‘대등통합’ 가능한가

공주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통합대학의 구조다. 통합 교명을 충남대학교로 하고 법적 대표 주소를 대전으로 정하면서 공주대의 독자적인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본부를 대전과 공주에 각각 둔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부가 몇 곳인가’가 아니라 총장·기획·예산·인사·입학·산학협력 등 실질적인 권한을 어디에 배치하느냐다. 공주시의회까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것도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공주대가 지역 교육·산업·경제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합에 따라 기능과 학생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공동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등통합’ 여부를 판단하려면 선언보다 통합 후 캠퍼스별 학생 정원과 교직원 수, 본부 기능, 예산 배분 등을 숫자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유사·중복학과는 어떻게...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

학과 구조조정 문제도 풀리지 않은 핵심 쟁점이다. 양 대학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유사·중복학과 처리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왔다. 충남대에서는 중북 단과대학을 각 대학에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된 반면 공주대에서는 유사·중복학과를 통합하거나 특성화하는 방향이 거론됐다.

당장 강제적인 학과 통폐합이 없더라도 문제는 그 이후다. 통합 이후 5년, 10년 동안 학생 정원이 감소하면 어느 캠퍼스의 어떤 학과부터 조정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교수 정원과 신입생 모집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학생들이 캠퍼스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교차수강할 수 있는지 역시 학생들에게는 교명보다 현실적인 문제다.

졸업장 하나에도 엇갈린 이해관계

졸업장과 학위 표시 문제 역시 대학 통합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충남대는 캠퍼스별 신입생 모집과 졸업장에 캠퍼스를 구분하는 방안을, 공주대는 캠퍼스 구분 없는 통합대학 졸업장을 주장하는 등 입장차가 확인됐다. 통합 이전 입학생에게 어떤 대학 명의의 졸업장을 줄 것인지도 민감하다.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선택해 입학한 대학의 정체성과 학위 가치가 걸린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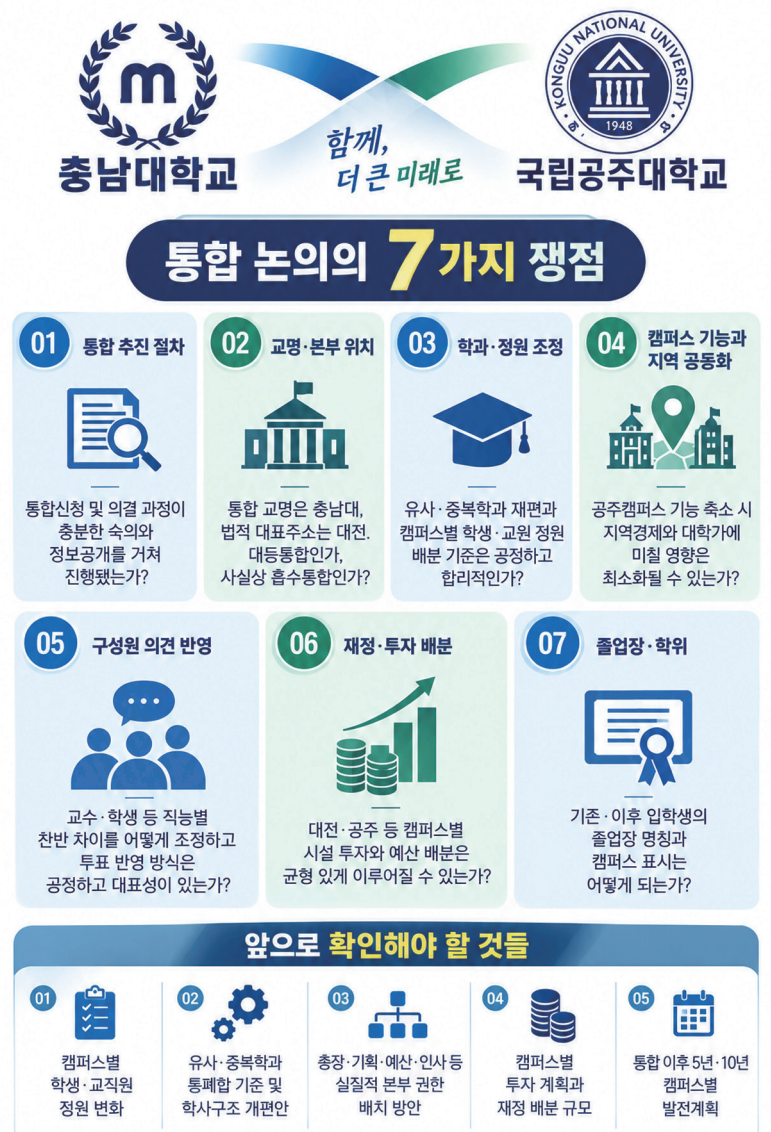
글로컬대학 D등급...‘통합 일정’에 쫓긴 것 아니냐

통합 추진 시점도 논란거리다. 충남대와 공주대는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충남대 교수회는 이와 관련해 사업 예산 감소 등에 대한 대학본부의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때문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통합하는 것인지, 글로컬대학 사업 일정과 평가 때문에 속도를 내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찬반투표...투표 전에 공개돼야 할 ‘숫자’

양 대학은 통합신청서안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구성원에게 공개한 뒤 8~10일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부결되면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장밋빛 청사진도, 막연한 위기론도 아니다. 통합 이후 대전·공주·천안·예산 등 각 캠퍼스의 학생 정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유사·중복학과를 어떤 원칙으로 조정하는지, 본부의 핵심 권한을 어디에 배치하는지, 캠퍼스별 투자

액과 글로컬대학 사업비는 어떻게 배분하는지 공개돼야 한다. 대학 통합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쉽지 않다. 두 대학의 이름을 하나로 만드는 행정절차를 넘어 수만 명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대학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의 성패를 가를 기준 역시 ‘얼마나 빨리 통합했느냐’가 아니라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동의를 얻었느냐가 돼야 한다.



[기획] 천안시 민선9기 첫 조직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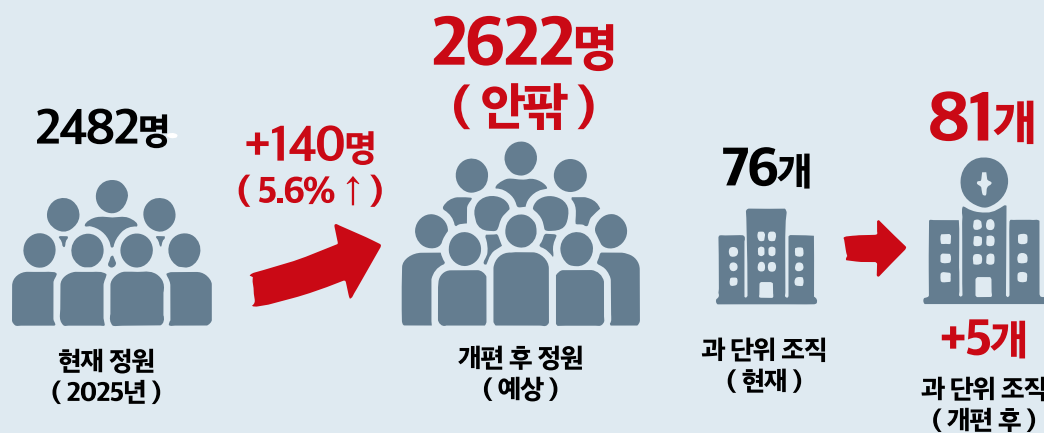
‘140명 증원’ ... 행정혁신인가, 몸집 불리기인가

정원 2482→2622명 안팎...5.6% 확대, 과 단위 조직도 76개→81개
장기수 시장은 '실무 중심 조직' 강조...대규모 증원 근거는 검증돼
제정 부담·업무량 분석·기존 인력 재배치 여부 공개해야

천안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한꺼번에 14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내놓자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인구 71만 명을 넘어선 대도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확충이라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과 업무량 분석을 토대로 한 '행정 효율화'보다 조직과 정원 확대가 앞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천안시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2482명인 정원을 2622명 안팎으로 약 140명 늘리고, 과 단위 조직도 76개에서 81개로 확대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정원이 5.6%가량 증가하는 대규모 개편이다. 천안시 인구가 지난 8월 71만 명을 넘어섰고 AI산업, 복지·돌봄, 교통, 도시개발 등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규모의 인력 보강 필요성은 인정된다. 실제 천안시는 2020년 68만5955명이던 인구가 2026년 8월 7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왜 140명인가'이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몇 명 늘어나는지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 왜 필요한지, 업무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기존 인력 재배치로 해결할 수 없는지를 객관적인 수치로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은 장기수 시장이 최근 밝힌 조직 운영 방향과도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인다. 장 시장은 지난 1일 간부회의에서 기존 조직개편이 국·과 단위 논의에 집중됐으며 앞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팀' 단위

숫자로 보는 천안시 조직개편



의 실무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용역보다 공무원 TF를 활용하고 실무 중심으로 시정 체질을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런데 과 단위 조직을 5개 늘리고 전체 정원을 140명가량 확대한다면 '외형보다 실무'를 강조한 조직개편 철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 주목되는 대목은 장 시장의 과거 발언이다. 장 시장은 천안시의원이던 시절인 2012년 천안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면서 조직 확대에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당시 그는 조직 증대에 대해 시민사회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며 시민적 동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과 하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도 "과가 늘 때는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 내부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량 증가 등 객관적 근거를 의회와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4년 전 시의원 장기수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기준은 이제 시장 장기수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됐다. 이번에는 과 하나가 아니라 과 단위 조직 5개와 정원 약 140명의 확대가 거론된다. 그렇다면 당시 장 시장이 강조했던 '객관적인 근거'와 '시민적 동의' 역시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 재정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공무원 증원은 한 번의 예산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급여뿐 아니라 각종 수당과 연금 부담금, 사무공간·장비 등 경상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신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40명 증원이 가져올 중장기 재정부담을 단년도 인건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천안시는 민선 9기 첫 추경을 통해 본예산보다 5430억 원 늘어난 3조954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지원, 교통·복지, 생활민원 등 시민들의 재정수요가 동시에 증가하는 상황이

다. 조직 확대에 투입될 자원과 시민 생활에 직접 투입될 자원 사이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하는 이유다. 천안시 조직개편은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다. 2024년 말 조직개편 당시에는 절차와 충분한 논의 여부를 놓고 시의회에서 여야가 충돌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조직개편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돼 통과되는 진통까지 겪었다. 당시 개편으로 행정기구는 6국 42과에서 8국 45과로 확대되고 정원도 13명 증가했다. 불과 수년 사이 조직개편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단순히 민선 9기 공약에 맞춰 조직도를 다시 짜는 수준을 넘어 기존 조직의 성과와 실패까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선 9기 천안시가 AI 특화도시와 돌봄, 소상공인 지원, 관광, 교통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바꾸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인구 71만 대도시를 10년 전 조직과 인력으로 운영하라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 다만 행정수요 증가가 곧바로 조직 확대의 면허가 될 수는 없다. 천안시는 140명의 증원이 필요한 부서와 직렬, 업무량 증가율, 민원처리 건수, 기존 인력의 업무강도, 재배치 가능 인력, 향후 5년간 추가 인건비 규모를 시민과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증원 이후 어떤 행정서비스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도 성과지표로 제시해야 한다. 장기수 시장은 과거 시의원 시절 조직 확대를 바라보며 "정확한 이유"와 "객관적 근거"를 주문했다.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 역시 다르지 않다. '140명이 필요하다'는 행정의 설명이 아니라 '140명이 왜 필요한지'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공무원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늘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비교로 보는 최근 조직개편

2024년	2469명 → 2482명 (13명 증가)	6국 42과 → 8국 45과 (2국 3과 증가)
2026년 (민선9기)	2482명 → 2622명 안팎 (약 140명 증가)	76개 과 → 81개 과 (5개 과 증가)

이번 증원 규모는
2024년의 10배 이상

시민을 위한 조직인가,
조직을 위한 조직인가?

천안시 조직개편,
그 시작과 끝은 시민이어야 한다.



INTERVIEW

MEDIA CHUNGCHONG

지역을 보는 눈, 시민의 목소리

“시민 삶 바꾸는 의회… 청렴으로 신뢰 쌓겠다”

엄 소 영 천안시의회의장

“견제와 협력의 기준은 오직 시민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고,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따지겠습니다.”

제10대 천안시의회 전반기를 이끄는 엄소영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묻자 ‘시민’을 가장 먼저 꺼냈다. 무조건적인 견제도, 명분 없는 협력도 경계했다. 시의회가 행사해야 할 견제권 역시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선 의원으로 12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온 엄 의장은 최근 미디어 충청과의 인터뷰에서 “의장은 한 명의 의원으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29명 의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회 전체를 살펴야 하는 자리”라며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든다”고 말했다.

그가 제10대 의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은 것은 ‘시민 신뢰 회복’이다. 의정구호인 ‘청렴으로 신뢰를! 능력으로 변화를!’을 선언에 그치게 하지 않고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구상이다.

인구 70만명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천안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엄 의장은 숫자보다 시민의 삶을 강조했다. 도시 외형을 키우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교통과 주거는 물론 교육·복지·문화·의료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추고 원도심과 신도심, 동부와 서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경기침체 속 소상공인 문제와 도농복합도시 천안의 농업 경쟁력,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의 전문성 강화 역시 제10대 의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엄 의장은 “천안이 얼마나 커졌느냐보다 천안시민의 하루가 얼마나 편해졌느냐가 중요하다”며 “시민의 목소리가 조례와 예산, 정책을 거쳐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 의장과 의문의 일문일답.

Q. 4선 의원으로 제10대 천안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것은.

“12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지만 의장이라는 자리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의원 한 사람으로 활동할 때와 달리 이제는 29명 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회 전체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먼저 든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시민의 신뢰를 차근차근 다시 쌓는

것이다. 제10대 의회의 의정구호가 ‘청렴으로 신뢰를! 능력으로 변화를!’이다. 이 말이 단순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실제 의회가 일하는 방식과 결과로 시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의원과 직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의장이 됐다고 현장과 멀어져서도 안 된다. 지난 12년 동안 시민을 만나면서 결국 답은 현장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거창한 변화를 말하기보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 시민들이 ‘이번 의회는 조금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씩 바뀌어나가겠다.”

Q. ‘시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의장이 생각하는 좋은 의회란 무엇인가.

“시민의 삶에 필요한 일을 제

로 해내는 의회다. 회의를 몇 차례 열었는지, 조례를 몇 건 만들었는지 같은 숫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의회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해결됐고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연결돼야 한다.

29명 의원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른 것이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에게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만 그쳐서도 안 된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되 실질적인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

어야 한다.

결국 시민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 그리고 ‘의회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의회가 좋은 의회라고 생각한다.”

Q. 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지역 발전에는 협력해야 한다.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있나.

“견제와 협력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목적은 같다.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준비된 사업이라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반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거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



되는 사업이라면 충분한 자료를 요구하고 따져봐야 한다.

집행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의회가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결국 천안시정을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히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 활동이 형식적인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 사업의 필요성부터 예산의 적정성, 사업 이후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까지 살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은 정

다. 원도심과 신도심, 동부와 서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도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사업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맞는지, 천안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지나치게 집중되지는 않는지 의회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도시 성장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천안이 얼마나 커졌느냐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천안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다. 농업도 단순한 지원 대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 기후변화,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등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Q. ‘우리동네 민원 해결사’, ‘바로 뛰는 민원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의장이 된 이후 시민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면 감사하지만 특별한 일을 했다기보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민원은 서류만 보서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다. 현장에 직접 가보면 시민이 왜 불편한지, 행정의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마

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했다.

의장이 된 이후에도 그 자세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장실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의장이 되고 싶지는 않다.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귀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뜻을 의정활동에 담겠다.”

Q. 초선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시민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의원이 됐으면 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는 것은 배우면 된다. 중요한 것은 주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시민과 한 약속, 자신이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29명 의원은 각각 경험과 전문성이 다르다. 그 차이가 의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의회 전체가 시민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Q. 제10대 천안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회로 기억되길 바라나.

“청렴으로 신뢰를! 능력으로 변화를!”이라는 약속을 실제 성과로 보여드리고 싶다.

시민의 뜻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그것이 조례와 예산, 정책으로 이어져 다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의회가 시민과 동떨어진 곳이 아니라 시민들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

4선 의원으로 12년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한 가지는 분명하게 배웠다. 행정의 출발도, 의정활동의 마지막도 결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10대 천안시의회 역시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시민에게 필요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겠다. 시민 가까이에서 현장을 살피면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당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이 결정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가’여야 한다. 필요한 일에는 힘을 모으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대로 따지겠다. 그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Q. 천안은 인구 70만명을 넘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다. 도시 성장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구 7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천안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도시의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100만 도시를 준비한다면 교통과 주거뿐 아니라 교육·복지·문화·의료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

천안시민의 하루가 얼마나 편해지고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가 더 중요하다. 양적 성장에 걸맞은 삶의 질을 갖춘 도시가 되도록 의회가 계속 점검하겠다.”

Q.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다. 의회가 거시적인 경제정책을 직접 만들 수는 없지만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는지 살피고 현장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지원책을 만드는 역할은 할 수 있다.

특히 지원사업이 행정 편의를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충남도의회, 천안 공공·응급의료 현장 점검

천안의료원 경영 정상화·단국대병원 닥터헬기 운영 살펴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들이 천안의료원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천안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정상화와 중증·응급의료체계 운영 실태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제371회 임시회 기간인 4일 천안의료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공공·필수의료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를 살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천안의료원에서 경영 개선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인사·계약·회계 등 조직 운영 전반의 개선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지난해 의료원 운영 전반

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된 데 따른 후속 점검 성격이다. 위원들은 공공병원의 감염병 대응과 취약계층 진료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료원 자체의 경영 혁신과 투명성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확보와 환자 이용률 제고, 진료기능 강화 등을 통해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단국대학교병원을 찾아 중증·응급환자 치료체계와 닥터헬기 운영 상황을 확인했다.

환자 발생부터 이송·치료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의료기관 간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충남도가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윤 위원장은 “천안의료원의 경영개선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조직과 의료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공공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 문화·체육 현안 집중 점검

민간위탁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등 심사·행정사무감사계획 확정



△ 대전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시의회가 문화·체육·관광 분야 민간위탁과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민간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인미동)는 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위탁기간 산정 기준과 사업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신규 예술인 실태조사 역시 기존 조사와 차별화하고 결과를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기부채납을 놓고는 투자금액의 적정성과 무상사용 기간 산정 근거, 사업자의 수행 능력 등을 집중 점검했다. 위원들은 기존 임대 방

식과 민간투자 방식의 재정 효과를 비교하고 무상사용 종료 이후 시설 잔존가치와 공공적 활용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축 야구장 개장 이후 기존 한밭야구장의 활용계획과 꿈돌이·꿈씨패밀리 마케팅 전략도 도마에 올랐다. 공예품 대전과

관광기념품 공모전은 유사 사업을 조정하고 심사·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위원회는 추가자료를 검토한 뒤 관련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 가결했다.

“재정위기 앞세운 전임 도정 책임론 멈춰야”

이상근 도의원, 민생·지역경제 예산까지 희생해선 안 돼



△ 이상근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남 재정 정상화 논란, 객관적 진단 우선해야
충남도의 재정 정상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도의회에서 재정 악화의 책임을 전임 도정에 돌리는 듯한 접근보다 객관적인 재정 진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국민의힘·홍성1)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민선 9기 충남도의 재정 진단과 운용 방향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가 2022년과 2026년 채무 규모를 비교하며 재정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재정 악화의 책임이 전임 도정에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단순한 채무 총액 비교

만으로 특정 시기의 재정 운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전임 도정의 성과를 지우거나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재정 부담과 세입 여건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과도한 ‘재정위기론’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부터 정비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를 지키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백석대 학생들, 떡·한과로 관광 창업 도전

‘청년 관광두레’ 선정… 전통음식 체험·밀키트 사업화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전통 떡과 한과를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창업에 도전한다. 대학에서 배운 조리·외식 분야의 전공지식을 상품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결하는 실천형 창업 활동이다.

백석대 앵커사업 충남형계약학과 외식조리서비스학과는 전공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17명 가운데 5명으로 구성된 ‘스타쉐프 비룡’팀이 ‘2026년 청년 관광두레 플러스사업’ 청년사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소모임에서 쌓은 전공 지식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전통 떡과 한과를 활용한 상품과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



△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하고 있다. 상품 기획과 개발은 물론 현장 운영, 고객 응대, 홍보·마케팅까지 사업화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방식이다. 지난 3일에는 백석대 글로벌외식관에서 지역 주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 음식 체험!

문화를 잇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전통음식 체험 콘텐츠를 참가자들에게 선보이며 상품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했다. 학생들은 앞으로 전통음식 상품과 밀키트를 개발·판매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순한 조리 실습을 넘어 지역 음식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희준 학

생은 “직접 만든 관광 콘텐츠를 실제 고객에게 선보이며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상품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실제 창업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계영 외식조리서비스학과 교수는 “학생들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부터 현장 운영과 사업화까지 경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 앵커사업단과 외식조리서비스학과는 앞으로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지역 관광과 연계한 사업으로 정착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순천향대 김세현, 전국대학테니스 혼합복식 준우승

충남대 이현서와 호흡…8강서 극적인 역전승



△ 준우승한 순천향대 김세현(좌)과 충남대 이현서 학생 모습

순천향대 김세현(2학년)이 ‘제80회 전국주계대학테니스연맹전’ 대학부 개인 혼합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지난달 25~31일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테니스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김세현은 충남대 이현서와 조를 이뤄 출전했다. 두 선수는 1·2회전을 잇달아 통과한 뒤 8강에서 이예창·김은서 조를 상대로 첫 세트를 0-4로 내줬으나 2세트를 4-2로 가져왔다. 이어 매치 타이브레이크에서 12-10으로 승리하며 역전에 성공했다. 준결승은 상대 조의 기권으로 통과했으며 결승에서는 이지환·최지우 조와 맞붙어 경기 도중 기권하면서 준우승을 확정했다.

김세현은 “8강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역전한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다음 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고 말했다.

청운대,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강화

학사부터 비자·체류까지 통합교육…1대1 상담도



△ 외국인 유학생 통합OT 및 한국법령이해교육 모습

청운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생활과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학사제도와 출입국·체류 관련 법령에 대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청운대는 지난 1일 청운홀에서 2026학년도 후기 외국인 유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학사 통합 오리엔테이션과 한국법령이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통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외국인등록과 신고의무, 체류자격·기간 관리, 시간제취업 허가 및 제한, 주요 위반사례 등을 안내했다. 이어 캠퍼스와 유학생 지원시설 이용방법, 학사관리 및 상담창구를 소개하고 비자·체류 관련 1대1 상담도 진행했다.

최인호 대외교류처장은 “유학생들이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서대 학생들, 네팔 홍수 피해 돕기 나섰다

유학생 호소에 모금·기후행동 캠페인



△ 학생과 교직원의 네팔 홍수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캠페인 모습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대규모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한 모금과 기후행동 캠페인에 나섰다.

호서대 네팔 유학생과 한국 학생들은 ‘Save Nepal, Save Us, Save Earth’를 내걸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모금과 탄소중립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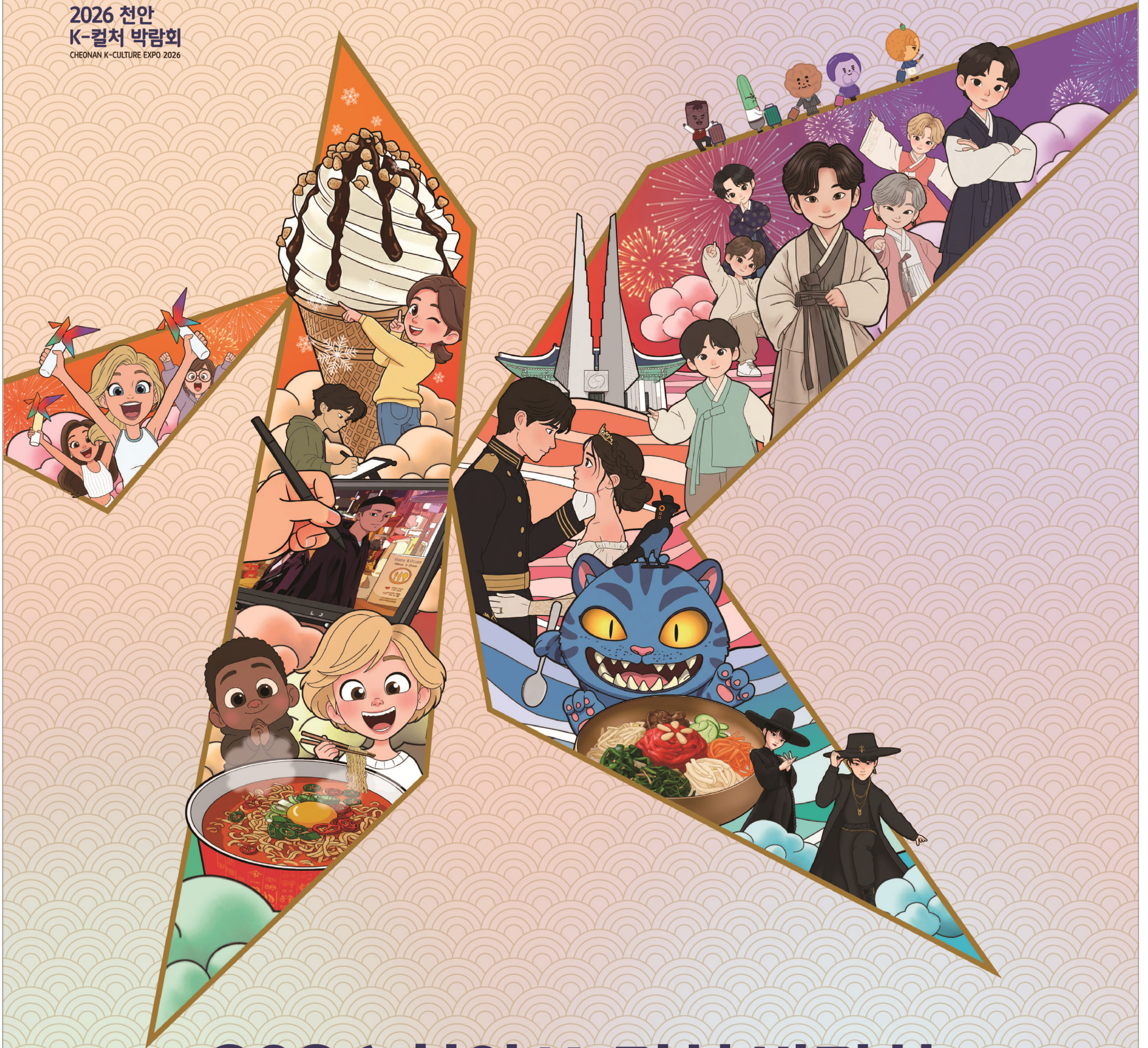
네팔 유학생회장 아짓 야다브 학생은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많은 생명을 잃었다”며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이번 재난을 네팔만의 문제가 아닌 기후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공동의 위험으로 보고 대학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호서대도 가족이나 거주 지역이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유학생을 파악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로 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금 모금 방법과 일정은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
CHEONAN K-CULTURE EXPO 2026

와우!
2025-2026 충남행문의해



2026 천안 K-컬처 박람회

CHEONAN K-CULTURE EXPO 2026

2026. 9. 2.(수) ~ 6.(일) 독립기념관

주최/주관



후원



총예산 : 4,100,000,000원

국비 : 200,000,000원 (4.9%)
도비 : 1,000,000,000원 (24.3%)
시비 : 2,900,000,000원 (70.8%)



현장의 순간,
그 이상의 이야기

B-CUT NEWS

사진으로 전하는 충청의 오늘
비컷 뉴스



천안 K-컬처 박람회
CHEONAN K-CULTURE EXPO

세계와 만나는 K-컬처의 무대, 천안이 빛났다

K-컬처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천안 K-컬처 박람회가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로
시민과 세계인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노을이 물든 천안
문화로 하나 되다

아름다운 노을 속 천안 K-컬처 박람회장
찾은 관람객들로 뜨거운 열기가 이어진다.



밤이 더 빛나는 천안

화려한 조명과 공연이 어우러진 야간 박람회장은
K-컬처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K-컬처, 세계가 함께 즐긴다

해외 관람객들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K-컬처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작은 소품에 담긴 큰 즐거움

다양한 체험과 전시 부수에서 관람객들이
K-컬처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고 있다.



문화가 흐르는 도시, 천안

천안의 상징물이 박람회와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다.

문화가
사람을 잇고
도시를 빛낸다

K-컬처의 중심
더 큰 천안의 내일

사람이 지역을 만들고 지역이 사람을 키운다

우리 이웃의 평범한 하루, 사람을 보는 지역의 창



충남 가을여행, 할인·축제·체험 한 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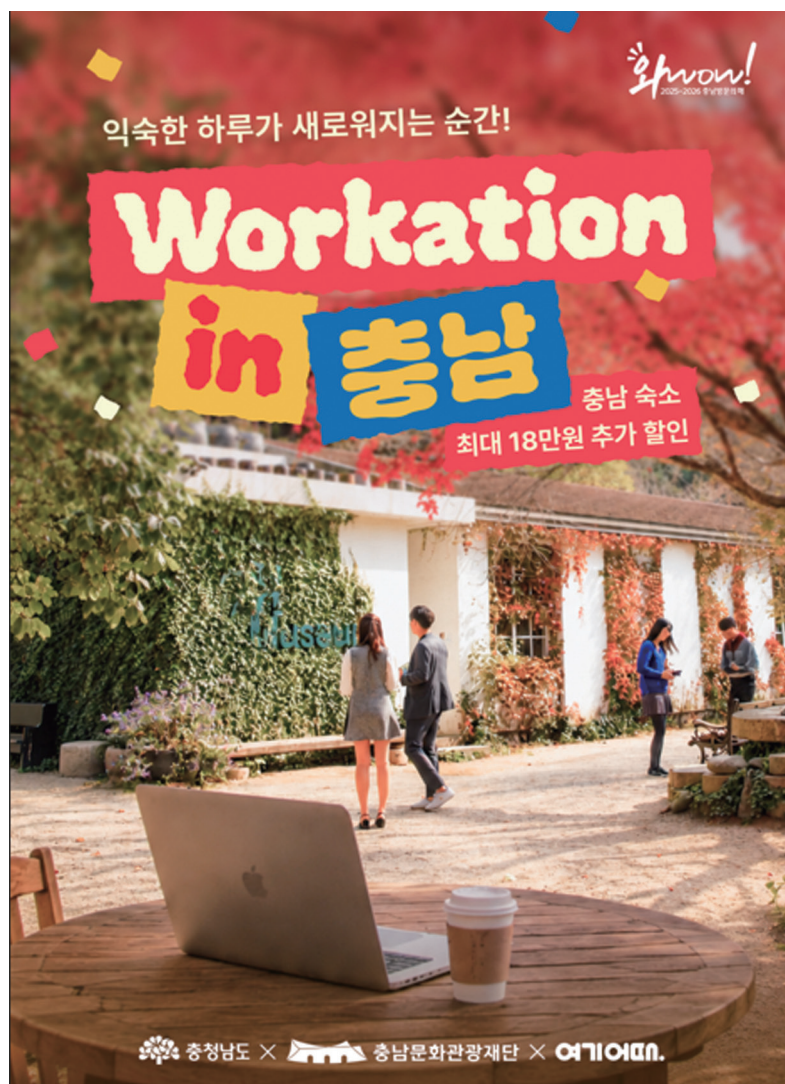
충남문화관광재단이 9~10월 두 달간 15개 시·군의 대표 축제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충남 트래블 페스타 2026’을 진행한다. 여기어때 등 국내외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연계해 숙박·레저·투어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미식 기행과 힐링·트레킹 등 20여

종의 테마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선셋요가와 미식 팝업스토어, 성지해움길 트레킹, 15개 시·군 스티커맵 챌린지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재단은 개별 지역 방문을 인근 시·군 관광으로 연결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남 위케이션, 숙박비 최대 18만원 할인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이 여기어때와 연계해 9월부터 ‘위케이션 충남’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기존 7개 시·군이던 대상 지역을 충남 15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했다. 여기어때 비즈니스 회원이 충남 위케이션 숙소를 이용하면 숙박 일수에 따라 1인당 1회 최

대 18만원의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은 9월 한 달간 1차로 진행한 뒤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차 운영한다. 평일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금·토요일과 법정공휴일 전날 숙박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CN갤러리, 윤호준 개인전 ‘생기_재형의 유희’

전통 도자에 현대적 상상력...13일까지 북촌서 전시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서울 종로구 CN갤러리에서 도예가 윤호준의 개인전 ‘생기(生:器)_재형의 유희’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

2026년 제9차 정기대관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전통 도자를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대적 놀이의 대상으로 재해석한 윤 작가의 ‘도자유희’ 연작을 선보인다. 지난 10여 년간 이어온 작업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작품은 작가의 페르소나이자 미성숙한 자아인 ‘아(我)’가 박물관 속 청자와 백자, 분청 등 전통 도자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아’가 도자에 생명을

불어넣고 함께 놀이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 도자를 현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 표현한다.

청자 작품에서는 고유한 형태를 변형하거나 작품 속 인물과 기물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백자는 청화의 평면적인 장식 문양을 입체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해 문양 속 주인공들이 현실로 나온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 재단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도자의 조형미와 현대적인 상상력이 결합한 윤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충남도민체전 폐막 천안시 종합우승

1등	천안시	45,424
2등	당진시	43,825
3등	아산시	43,425
4등	서산시	40,075
5등	보령시	37,525
6등	홍성군	37,200
7등	공주시	36,150
8등	태안군	35,700
9등	논산시	34,750
10등	계룡시	34,525
11등	청양군	33,975
12등	서천군	33,075
13등	예산군	33,025
14등	금산군	32,475
15등	부여군	28,750

2026 제7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천안시의 종합우승으로 4일간의 열전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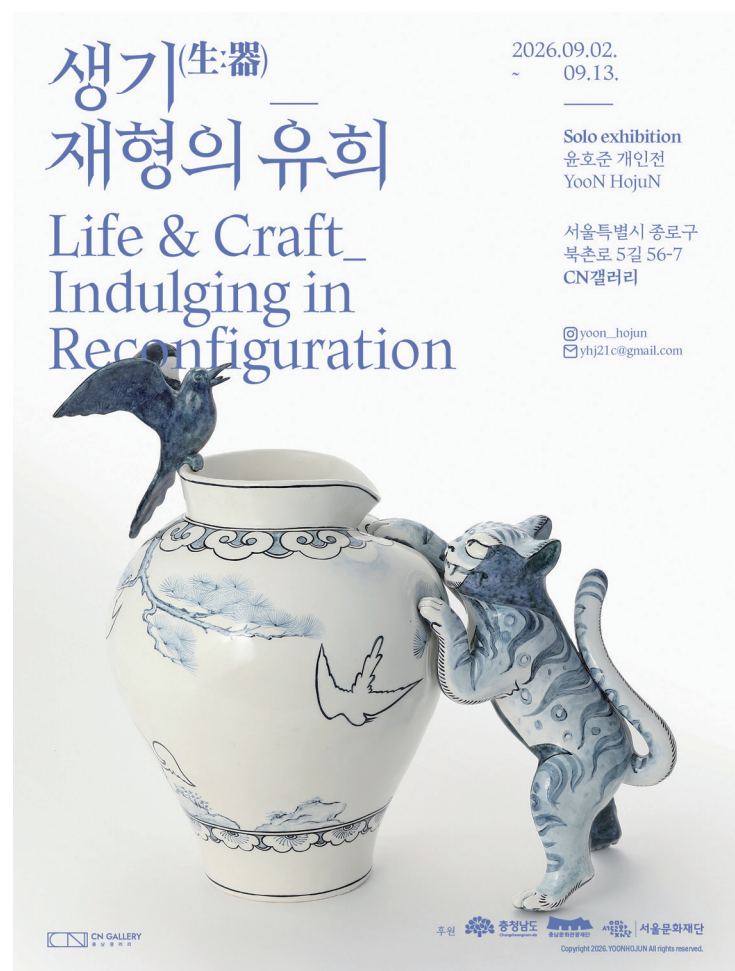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당진시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충남 15개 시·군 선수단 1만1228명이 참가해 32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종합 순위는 천안시가 1위에 올랐고 개최지 당진시가 2위, 아산시가 3위를 차지했다.

이전 대회보다 성적이 크게 향상된 선수단에 주는 성취상은 당진시가 1위, 금산군 2위, 아산시가 3위를 기록했다. 장려상은 서산시와 보령시, 화합상은 계룡시, 모범선수단상은 서천군에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부 신기록 24개가 나왔으며 5관왕 5명을 포함해 18명의 다관왕이 탄생했다. 바둑도 시범종목으로 새롭게 운영됐다.

김영범 충남도체육회장은 “도민이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79회 대회는 2027년 논산에서 열린다.





더 깊이 보는 시선, 더 나은 지역의 내일

지역을 읽는 생각, 충청의 내일을 여는 힘

Media Chungcheong
Colum 미디어 충청 칼럼

내포 어린이병원, '무늬만 어린이병원'이 되서는 안 된다

내포신도시에 어린이병원이 들어선다. 이미 건립이 진행되고 운영기관도 단국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이제 논쟁의 초점은 어린이병원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다. 문을 연 뒤 과연 이름에 걸맞은 어린이병원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를 따져야 할 때다.

어린이병원은 건물에 '어린이 병원'이라는 간판을 붙인다고 완성되는 시설이 아니다. 소아청소년과 외래진료 몇 개를 운영하는 것과 지역의 소아의료를 책임지는 어린이병원은 분명히 다르다.

내포와 홍성·예산을 비롯한 충남 서부권 부모들이 어린이병원에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감기 진료가 아니다. 밤늦게 아이에게 갑자기 고열이 나거나 호흡곤란과 경련이 발생했을 때 갈 수 있는 병원, 응급상황에서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전문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의료체계다. 따라서 이제 충남도와 운영기관이 구체적인 숫자로 답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몇 명을 상주시킬 것인가. 야간과 휴일 진료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24시간 소아응급진료가 가능한가. 영상검사와 마취·수술, 입원치료는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가. 중증 소아환자가 발생했을 때 천안의 단국대병원 본원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전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지어도 '어린이 병원'이라는 이름만 가진 시설에 머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운영기관이 대학병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의료수준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중요

한 것은 단국대병원이 현재 보유한 소아의료 역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의료진과 기능을 실제 내포에 배치할 것인가다. 본원 의료진이 필요할 때 잠시 진료하는 방식인지, 전문의가 내포에 상주하는 체계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천안으로 보내는 구조라면 충남 서부권에 어린이병원을 만드는 취지가 무엇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재정 역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아의료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야다.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야간·휴일 및 응급진료까지 확대할수록 운영비 부담은 커진다. 결국 충남도가 어떤 수준의 공공의료를 요구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얼마나 책임질 것인가가 병원의 수준을 결정한다. 그래서 개원 전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다. 전문의 수, 진료과목, 병상 수, 응급·야간진료 체계, 검사·수술 가능 범위, 본원 연계체계, 연간 운영비와 도비 지원 규모다.

내포 어린이병원은 충남도의 또 하나의 건축사업이 아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충남 서부권의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다. 건물은 예산으로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신뢰받는 어린이병원은 건물만으로 만들 수 없다. 개원이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 아이가 위급한 순간 부모가 "내포 어린이병원으로 가자"고 주저 없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내포 어린이병원은 '무늬만 어린이병원'이라는 우려를 넘어 충남 서부권의 실질적인 소아의료 거점이 될 수 있다.

기고
CONTRIBUTION

의정의 답은 현장에 있다



박 만
홍성군의회 의장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며 가장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다.

정책과 예산은 결국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서류와 보고 서만으로는 군민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불편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직접 현장을 찾아 눈으로 확인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무엇이 문제이고 필요한지 제대로 알 수 있다.

오랜 기간 행정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를 수없이 경험했다. 행정에서는 작은 문제로 보이는 불편이 주민에게는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좋은 취지로 추진한 정책도 현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제10대 홍성군의회는 '행동하는 의정 책임지는 의회'를 내걸고 출발했다. 행동하는 의정의 시작도 현장이다.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현안을 확인해 정책과 예산에 담는 것이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물론 현장을 찾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검토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현장이 문제를 발견하는 출발점이라면 정책은 해결 과정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홍성은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내포신도시 발전과 충남혁신도시 완성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해법의 출발점은 결국 군민이다. 홍성군의회는 군민과 행정을 잇는 가장 가까운 통로가 되겠다. 문제가 생긴 뒤 움직이기보다 먼저 현장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정책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 의정의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군민이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에 답이 있다.

기고
CONTRIBUTION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한 번 더 의심해야



조 필 호
충남경찰청 경사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자영업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피싱 의심계좌 임시거래정지는 4935건에 달한다.

수범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소방서나 시·군청 공무원을 사칭해 조례 변경이나 재난복구를 이유로 물품 납품을 요구하거나,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빙자해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위조 공문과 명함까지 동원한다.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범인이 의사·소화기 등의 긴급 견적을 요구한 뒤 특정 납품업체를 소개했다. 해당 업체는 높은 이윤을 보장한다며 다른 생산업체의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구매확약서와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업체와 담당자는 모두 허구였고 범인들은 빠른 송금을 재촉했다.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확인'이 중요하다. 공공기관은 기록을 남길 수 없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 공무원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사업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공문에 적힌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도 살펴야 한다. 지나치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특정 업체에 송금을 재촉한다면 일단 거래를 멈춰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긴급하다'는 말에 서두르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다.

지역의 사선으로
충청의 오늘을 전합니다

忠清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미디어 충청
MEDIA CHUNGCHONG

발행인·편집인 엔케이미디어(주) 나경화 | 등록번호 충남, 다01330 | 등록일 2013년 7월 30일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181, 204호 | 대표전화 041-415-1567



정직한 보도
정확한 취재와 균형 잡힌 사선으로
팩트에 기반한 뉴스를 전합니다.



지역 중심
충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장 취재
발로 뛰는 취재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음 7월 27일)

제480호

창간일 2013년 7월 30일

주간신문 (매주 화요일 발행)

지역의 시선으로
충청의 오늘을 전합니다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늘, 현장에 있습니다.

N 미디어 충청

MEDIA CHUNGCHONG

충청의 사람과 지역,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잇는 언론
미디어 충청이
오늘도 현장을 달립니다.

지역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됩니다

충청의
더 큰 내일,
미디어 충청이
열겠습니다.

천안 아산 홍성 예산
당진 서산 보령 청양 태안
공주 논산 금산 세종 대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충청의 오늘, 미디어 충청이 전합니다.



정확한 보도

정확한 취재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팩트에 기반한 뉴스를 전합니다.



지역 중심

충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지역 현안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현장 취재

발로 뛰는 취재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성장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